

후쿠시마 방류 1년...잠잠해진 '오염수 포비아'

남광주시장 손님 다시 발길 이어져...광주·전남 방사능 검출 없어 환경단체 "그래도 안심해선 안돼...검사 품목 확대 전수조사 필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지 1년(24일)이 됐지만, 광주·전남에서 1년전 방사능 오염수 공포는 사실상 사라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지역 수산업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파장이 언제든 되풀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오염수 포비아가 뭐예요? = 22일 오후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은 가을 철 전야회를 뜨는 상인들의 손길로 분주했다.

횃갑 손질을 기다리던 김석중(50)씨는 "처음에는 걱정됐는데 이제는 그냥 신경쓰지 않고 해산물을 먹는다"며 웃어보였다.

13년간 완도 전복을 판매했었다는 상인 김모(58)씨는 "다들 무뎠던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씨는 "오염수 방류 초기에는 손님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며 "이후 한 두달 지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오징어와 다양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상인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대답했다.

방사능 걱정에 원산지나 일본이나 묻는 손님들도 있지만 매출에 지장을 줄 만큼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게 상인들의 말이다.

오히려 상인들은 고물가에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전복 판매 상인은 "수족관 전기세만 한달 100만원이 넘게 나오지만 추석 대목을 앞두고도 하루 20

만원도 채 팔지 못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전남 방사능 '이상 무' = 전남은 전국에서 수산물 생산량이 가장 많지만, 지난 1년동안 진행된 검사에서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경우는 '0' 건이었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역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광주 286건, 전남 3829건)를 진행한 결과 방사능 검출된 경우는 없다.

생산 수산물이 없는 광주는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일주일에 1번 꼴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 핵종 분석기 2대를 구비하고 있어 올해 총 286건의 검사를 진행했다. 대상은 학교 급식, 수산물 유통 시장 등 다양하다.

전남도는 지난 5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삼중수소 분석기인 '액체섬광계수기'를 구매해 본격적인 방사능 검사에 나서고 있다. 이달 중 추가로 한대를 더 구매할 예정이다. 삼중수소는 다른 방사성 핵종보다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내부 피폭 위험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수산업의 규모가 큰 만큼 매일 생산·유통 단계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생산단계에서는 도 해상 수산과학원(감마핵종 4대, 베타핵종 1대)이, 유통 단계에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감마핵종 분석기 2대)을 통해 방사능을 조사한다.

오히려 올해 전남 지역 수산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5만 7000t 증가한 191만t으로 집계됐다.

◇안심은 '시기상조' = 환경단체는 당장 방사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이틀 앞둔 22일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을 찾은 손님들이 가판대에 진열된 수산물을 바라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검출되지 않는다고 안전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1년이란 시간은 방사능이 나타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면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석면'의 경우에도 피해가 십수년이 지나 드러나듯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도 암과 같은 병의 모습으로 시간이 지나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표본조사로만 이뤄지는 방사능 검사 방식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사무국장은 "현재 방사능 검사는 품목별로 1개씩만 실시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1개 품목이 안전하다고 해서 모두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검사 품목의 종류를 확대하고 전수조사 방식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숙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공동행동 상평실장은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과학의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정부만 큼은 국민들에게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말을 해선 안된다"면서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가위바위보 지면 바다 입수하는 '죽음의 게임' 지적장애 친구 숨지게한 3명 살인죄 인정 안돼

폭행치사 20대 징역 4년 선고 공동폭행 10대 2명 소년부 송치

법원이 지적장애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일당(4월 24일자 광주일보 6면)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20대 남성에게는 폭행치사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일행 2명에게도 살인과 살인 방조 혐의 대신 공동폭행과 공동폭행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지혜)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16)군은 공동폭행 혐의, C(14)양은 공동폭행 방조 등 혐의를 각각 인정해 2명 모두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결정을 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일 목포시 북항 선착장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특수학교 학생 C(18)군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해경은 "바다입수 내기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진 A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발적으로 밀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A씨만을 중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CCTV영상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이들이 C군이 동일한 패턴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습관을 알고 패자로 만들어 입수를 강요했다고 보고 살인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C군이 수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며, 사건 당일에도 장난치며 같이 시간을 보낸 점 등을 보면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건호 고홍균의원 당선무효 확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신건호 고홍균의원에게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직을 상실하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대법관 오석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고홍균의원으로 출마한 신 전 의원은 같은해 5월 20일 캠프 관계자 2명과 함께 지역 주민의 집을 찾아가 "지지해 줘서 고맙다"며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와 음료수 한 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가 현금과 음료수 상자를 준 사실을 몰랐고 공모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전달할 당시 신 전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캠프 관계자 2명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건 인사이트

흠친 차로 사고 낸 10대, 내차 아니라고 했는데... 차량 연결된 휴대전화 블루투스에 음악 울려 절도 '덜미'

흠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10대가 도난 차량과 휴대전화 블루투스가 연결된 탓에 덜미를 잡혔다.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는 A(18)군을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전날 밤 10시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무안광주고속도로 합평나비터널 인근을 주행하던 A군은 밤 11시 40분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현장에서 빠져나온 뒤 경찰에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배가 아파서 잠깐 내렸는데 버스기사가 그냥 가버렸다"며 구조 요청을 했다.

당시 경찰은 이미 "합평나비터널 인근에서 단독사고가 났는데 위험해보인다"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하고 버려진 차량과 운전자 인상착의를 확인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사고차량 운전자로 보고 현장까지 동행을 요청했지만, A씨는 "내 차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런데 A씨가 차량 가까이 다가가지 차량에서 음악을 흘러나왔다. 차량과 A씨 휴대전화 블루투스가 연결된 것이다.

A씨는 그제서야 "차를 훔쳤고 사고가 나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막막해 거짓 신고하게 됐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A씨가 물건을 훔치려고 차에 들어갔다 열쇠가 있어 훔쳐 타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